

시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지평, 대성동 민관협력 프로젝트

새로운 마을만들기 전략의 필요성

○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마을만들기의 활용성 증가

-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 마을만들기는 지역 공동 문제의 해결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

○ 특수상황지역에서의 '주민주도' 마을만들기의 한계

- 접경지역이나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인적물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 적지 않은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음

통일맞이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 사례

○ 특수지역으로서의 대성동 마을의 특성

- 1953년 7.27. 한국전쟁 휴전협정 결과 공동경비구역(JSA)내에 유일하게 조성된 최북단 '자유마을'로서 현재까지 유엔사령부가 마을을 관할

〈대성동 마을 현황 및 특징〉

구분	내용	위치
현황	· 인구/면적 : 49세대 207명/4,957천 m ² (농경지는 4,830m ²) · 주택 : 총 51동(빈집 4동 포함)	
특징	· 주거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1년에 8개월 이상 마을에 거주해야만 주민의 자격이 유지 · 매일 19시부터 20시까지 민중중대의 가구별 인원 점검이 있으며, 매일 0시부터 5시까지 통행이 금지 · 주민의 직계 가족, 친척, 대성동 주민이 초청한 사람 외 일반인의 마을 방문 불가	

○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 추진의 배경

환경 요인	· 주택의 심각한 노후 및 겨울철 극심한 추위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 · 대부분의 주택이 지적 및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주민의 주택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며, 이는 노후 주택의 자발적 개보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
정치·사회·경제 요인	·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·정치적 순기능 공유 및 확산이 참여형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 형성 · 지역 특성상 주민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
정책·제도 요인	· 박근혜 정부의 '정부3.0' 채택으로 개방·공유·소통·협력 가치의 중요성 증가 · 민관 거버넌스 논의 활성화 :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'정부3.0 국민디자인단'은 참여형 정책을 현실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며, 이것이 대성동 '민관 거버넌스 구축' 기본방향 정립의 배경이 됨

○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의 추진단계

- 2015년 7월 11개 '관계기관 협약식'을 기준으로 형성기와 발전기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

〈대성동 마을 프로젝트의 발전단계별 특성〉

구분	형성기(2014. 7. ~ 2015. 6.)	발전기(2015. 7. ~ 현재)
추진 주체	· 중앙정부(행자부) + 지역주민	· 민관협력단(실무추진단)
주요사업 및 활동 내용	· 경기도지사, 파주시장의 대성동 마을 방문 → 행자부에 대성동 마을 노후주택 건의 · 마을 프로젝트를 활용한 대성동 마을의 통합적 변화 방안 모색	· 노후주택 보수, 마을경관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의 지속적 전개, 기가사랑방 및 마을기록 전시관 개관 · 국민디자인단 참여를 통한 대성동 마을계획 · 국민성금 모금과 캠페인(네이버 해피빈) 전개
특성	·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(노후 주택, 마을 인프라 개선) · 중앙정부 주도 + 지역주민 참여	· 통합적 접근 : Hardware + Software + Humanware · 협력적 추진주체 구성 및 다양한 참여자 간 네트워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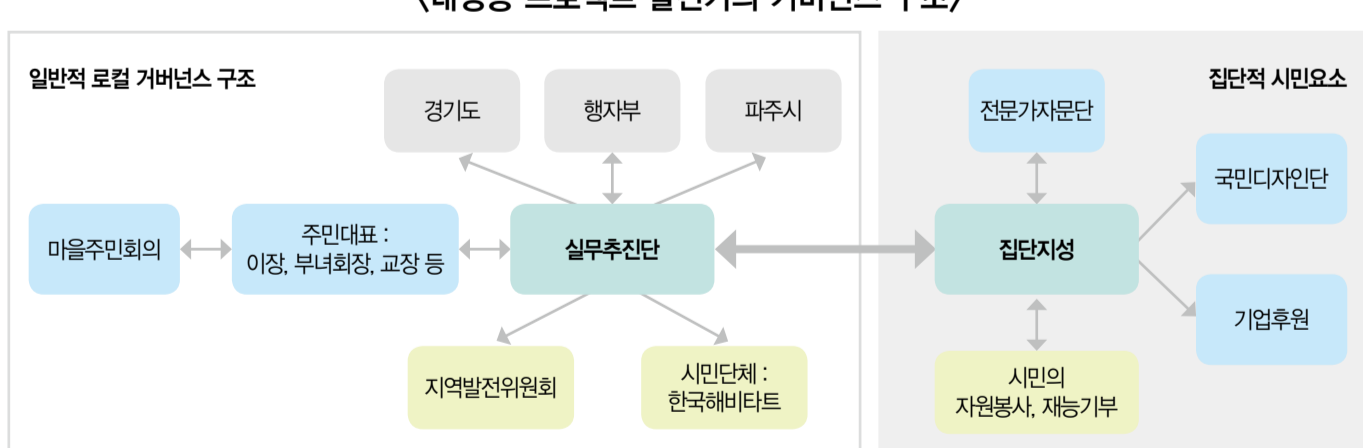
○ 다양한 공공(행정)부문, 시민사회부문 및 기업의 참여

구분	주체 및 역할
행정 부문	· 행정자치부 : 주민의견 수렴 및 국민참여 유도 및 홍보, 재정 및 행정적 절차 지원, 참여기관 간의 역할 조율, 시민참여 촉진자(civic enabler)의 역할 · 지역발전위원회 : 새마을사업(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)으로 주거환경 개선 · 경기도 : 대성동 프로젝트 행·재정적 지원, 마을공동체 활성화(따복마을) 지원 · 파주시 : 대성동 프로젝트 행·재정적 지원, 건축공사 발주 및 감독 등
민간 부문 (시민사회)	· 마을회 및 마을 거주민 : 마을 주민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· 시민단체(한국해비타트) :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과 캠페인 추진 · 전문가 자문단(12인) : 대성동 마을 비전과 프로젝트 추진 전략 논의 및 자문의견 제시 · 국민디자인단(11인) : 정책설계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 재능을 기부
민간 부문 (기업)	· NH공사·새마을금고 중앙회(노후주택 보수 자금 지원), KT&G(창호 교체 자원 자금), KT(기가 사랑방 구축), 경희대 한방병원(무료 의료봉사), 청호나이스(주민편의시설 제공), 네이버(해피빈 국민성금 캠페인)

○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'집단적 시민요소'의 적극적 활용

- 국민디자인단, 기업후원, 일반시민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등 집단적 시민요소를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개입시켜 폭넓은 시민 참여 활성화
- 사업 추진 과정을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의 각 주체들과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 채널 구축
- *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'국민생각함'은 다수의 참여자가 토론, 투표, 설문을 통해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집합적인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
- * 이를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, 창의적 아이디어 및 대안적 방안의 발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존의 거버넌스 형태에서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형성

〈대성동 프로젝트 발전기의 거버넌스 구조〉



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

○ Civic Enabler으로서 행정의 역할 중요

- 접경지역이나 특수상황 지역 등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마중물로서 촉매제의 기능을 수행
- 대성동의 경우 특히 행자부 차관의 리더십에 바탕한 시민사회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민참여 촉진자(civic enabler)의 역할을 수행

○ '집단지성'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수단 확보가 중요

- 마을만들기, 지역공동체 등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의 온·오프라인 참여 시스템 구축
- 다양한 참여주체의 활발한 의사소통은 참여자 간 숙의를 통해 상호학습의 기회를 마련할 뿐 아니라, 이를 통해 혁신성과 창조성을 증대

○ 일반기업 및 시민사회와 연계한 시민주도성(citizen initiative) 강화 필요

-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그램(CSR), 시민사회내의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일반 시민들이 재능기부, 봉사활동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되, 일회적 참여가 아닌 지속성 확보 필요